

한국 NGOs의 현황과 활동

우 실 하 / 강원대 사회학과 강사

1. 들어가는 말

환경운동의 역사가 짧고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경우 NGOs의 현황이나 구체적인 활동내역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수집·정리한 자료의 한계내에서, 우리나라 환경운동을 4시기로 나누어 그 성격을 살펴보고 93년 현재 시점에서 민간환경운동단체의 현황과 지지기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 등을 검토해 볼 것이다.

사실상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할 때에는 순수한 민간환경운동단체 이외에도 사단법인이나 사회단체로 환경치나 정부부처에 등록된 단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처럼 시민사회가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NGO들 간에도 많은 차별성이 있으며 '관변단체'로 지적될 만큼 '준-정부조직' (?)에 가까운 단체들도 많다. 이 글은 주로 순수민간환경운동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분석을 한 것이다.

2. 시기별 환경운동의 전개

통상 한국사회의 환경운동을 3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나, 이 글에서 필자는 93년 3월 이후 결성된 '전국조직형태'(전국환경운동연합, 배달환경클럽...)는 새로운 환경운동의 양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93년 3월 이후를 제4기로 구별하고자 한다.

(1) 제1기 : 60년대~70년대

60년대 경공업과 수입대체산업이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그 부산물로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각종 오염문제는 주로 중화학공단이 위치한 지역(특히 임해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의 집단행동의 형태로 돌출되었으나 경제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오염문제의 제기 자체도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반체제운동으로 낙인찍혀 억압받는 지경이었다.

(2) 제2기 : 80년~87년 6월 항쟁까지

이때에는 기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내적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결과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으나 이에 상응하는 공해방지시설이나 정책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환경공해는 급속하게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지적으로 돌출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인 반공해운동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필두로 1984년 '반공해운동협의회', 1986년 '공해반대 시민운동 협의회' 등이 창립되어, 5공의 비민주성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단체들과 연대하면서 공해문제를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운동은 도시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지역적 환경운동도 전문적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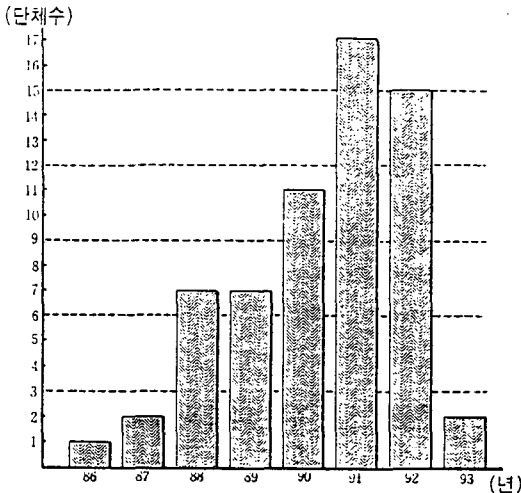
(3) 제3기 : 87년 6월 항쟁이후~92년

6월 민중항쟁이후 얻어진 상대적인 민주적 개방성은 확산일로에 있던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몬트리올 의정서(1990)등의 국제적 환경규제의 영향으로 '환경6법'(1991년 2월부터 발효)이 입법되기에 이른다.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제3기는 전문적인 환경운동단체들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표 1>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시민환경단체들이 87년~92년에 창립된 것들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운동단체에서도 (ex)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 환경관련 부서나 기관을 설치하여 활발하게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목적과 전략을 지닌 환경단체들이 출현하여 이슈에 따라 연대하면서도 독자적인 색깔을 지니면서 운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근본생태론적 지향에서부터 생태마르시즘에 이르는 다양한 이념을 지닌 단체들의 등장은 이 시기의 특징이자 본격적인 환경운동의 서장을 여는 것이었다.

<표 1> 미등록 민간환경운동단체의 결성연도별 분류 (총 72개 단체중)



출처 : (가칭)시민의 신문, 준비4호, 1993. 3.31 : 경실련 ※창립연도의 분류가 가능한 72개 단체

이들 단체의 활동은 주로 도시안보, 교통, 생활환경, 소음, 쓰레기 등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20~30대의 전향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환경6법'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993

(4) 제4기 : 93년 이후

제3기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 한국사회에서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반성이 지속적으로 일기 시작하였고, 이런 조직을 바탕으로 전지구적 환경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전국적 조직화'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93년 3월 26일 배달환경클럽이 먼저 전국 12개 도시를 중심으로 지부결성을 했으며, 그동안 실질적으로 민간환경운동을 주도해 온 공해추방운동연합이 주축이 되어 93년 4월 2일 8개 단체를 규합하여 '전국환경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환경개발센터(92년 11월)를 운영하고있는 경실련도 93년안에 전국 30개도시에 지부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수도권외의 5개 지역(광명, 구리·미금·남양주, 수원, 안산, 안양)에 지부결성을 마친 상태이다.

이러한 전국적 조직화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환경운동의 형태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이 내부의 부설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예정 : 전국환경연합), 배달환경연구소 (91.6 : 배달환경클럽))의 전문적 조사결과들과 결합할 때 진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3. 환경운동단체 현황

경실련 환경개발센터가 엮은 「한국의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는 98개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제3기에 결성되었으며, 45%에 해당하는 43개 단체가 서울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순수 민간환경단체로서 환경처 등에

〈표 2〉 환경처 미등록 민간환경단체 현황

(1992년 현재)

성격	환경운동단체	환경문제연구단체	지역환경단체	부차적단체				계
				종교	소비자	여성	직능	
단체	7	3	15	4	5	6	5	45
(비율)	(16%)	(7%)	(33%)	(9%)	(11%)	(13%)	(11%)	(100%)

출처: 전의찬,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와 사회환경교육: 현황과 개선대책” 『한국환경교육 학회지』, 제3호(1992년 11월) 49쪽

등록되지 않고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40여개에 불과하다. 93년에 결성된 단체가 2개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무시하고 92년까지의 실질적인 민간환경단체는 〈표 2〉에 보이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4. 예산, 회원수 현황

환경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의 경우 환경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400만명을 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원수에 대한 통계도 전무한 실정이며, 더군다나 예산규모는 거의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경실련 환경개발센터가 「한국의 환경단체」라는 책을 엮으면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파악이 가능한 단체의 현황을 모아본 것이 〈표 3〉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몇몇 예외적인 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500명 미만의 회원과 3000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어렵게 꾸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입된 회원들의 대부분(약 70~80%)은 이름만 걸어두고 아무런 역할도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정책연구소(소장: 신창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45개 민간환경단체의 경우 사무실 운영비가 100만원이하(28.9%), 100~300만원(33.3%), 300~500만원(8.9%), 500만원 이상(26.7%)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단체에서 매월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수도 100명이하가 5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조건아래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몇몇의 의욕적인 봉사자 희생으로 꾸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민간환경운동단체의 지지기반

새로운 사회운동(NSMs: New Social Movements)의 전형적인 형태인 환경운동은 주로 신중한 계층의 전문직 지식인이나 주부·학생 등이 주된 지지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표적인 민간환경운동단체인 ‘서울환경운동연합’(구: 공추련)의 경우 1000여명 이상의 회원 가운데 회사원이 39.7% 학생이 20.6%를 차지하며, 전체 회원의 약 70%가 20대 중반에서 30대에 집중되어 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역시 20대~30대가 대부분이며 여성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푸른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은 여성이 70%를 이루고 있으며 20대~30대 초반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100여명 회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국 사회의 환경운동은 주로 지식인·주부·대학생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20~30대의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환경운동이 ‘배부른 중산층’의 전유물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와 교육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해 가려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6. 민간 환경운동단체의 이념적 지향성

제3기에 다양한 형태의 환경단체들이 급속히 등장하면서 이념적·지향성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다양한 이념적 지향

〈표 3〉 민간환경운동단체 예산, 회원수 현황

(파악가능한 33개단체)

단체명	연간예산	회원수	단체형태
공추불(공해추방운동불교인 모임)	1500만원	300명	
서울환경운동연합(구: 공추련)	?	(1000~1800)	
광륙회	2000만원	670명	사단법인
광주환경련	2500만원	240명	사단법인
김해환경보존회	?	60명	
낙동강 보존회	?	400명	
낙협. (낙동강살리기운동 협의회)	1500만원	584명(가입단체 제외)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1500만원	310명	
녹색삶 실천을 위한 시민의 모임	1억	8000명	
(서울시약사회회원 단체 가입되었음을 참조)			
녹색평화시민운동연합	?	300명	
대구환경운동연합	1200만원	300명	
마창환경운동연합	500만원	500명	
목포환경운동연합	400만원	135명	
반핵평화운동연합	?	300명	
배달환경클럽연구소	4억	2268명	
부산환경운동연합	6000만원	1552명	
울산환경운동연합	700만원	200명	
자연사랑 낙동강 1300리피	4500만원	1300명	
자연의 친구들	?	(400~500)	
지구환경연구소	8천500만원	170명	
푸른평화운동본부	5천만원	800명(공동체회원포함)	
푸른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	2300만원	80명~100명	
하늘·땅·물·빛	?	40명	
한국교회환경연구소	5300만원	800명	
한국불교사회교육원	?	150명	
한살림 모임	3000만원	250명	
환경개발센터(경실련內)	3억	비회원조직	사단법인
환경과 공해연구회	?	150명	
환경사회정책연구소	3700만원(92.8~12월까지)	30명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	180명	
환경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여수·여천)	?	50명	
환경정책연구소	3300만원	150명	
환사연(환경보전 대전시민연합)	800만원	(8개단체가입)	

〈표 3〉은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의 국내환경단체 현황조사자료 (93.2. 미발표)를 토대로 필자가 가진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것임.

※예산·회원이수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부족하나마 실는다.

〈표 4〉 환경운동 단체의 이념적 지향성 분류

(제3기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념적 지향성	환경운동단체	환경문제에대한 인식
마르크스주의 및 생태마르크스주의 지향	반핵평화운동연합 공해추방운동연합 대구공추협 부산공추협	· 환경위기가 자본주의 체제모순이나 제국주의에 의한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 · 기존 노동운동의 주체를 고수하여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하고 시민을 보조세력으로
생태사회주의와 사회생태론적 지향의 접이지대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 YMCA 환경과공해연구회 한국교회환경연구소	환경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찾으면서도 비교적 현실적인 전략을 추구하며, 전문성과 대중성을 결합하려고 노력
근본생태론적 지향	한국불교사회연구원 한마음한몸운동 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자연의 친구들: 필자첨부)	환경위기의 원인을 산업문명의 기계론적 세계관, 혹은 생산력주의, 인간의 도덕심부재(이기주의·편의주의)에서 찾고, 그 해결 방안도 주로 교육이나 의식의 변화에서 찾으며, 이에 기초한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환경개량주의적 지향	환경정책 연구소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환경위기의 원인을 무분별한 경제개발 혹은 경제우리의 부재에서 찾고, 대정부 로비나 정책대안을 통해 개량적 변화를 추구

출처: 이상현, “한국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1993.2) 118~121쪽의 내용을 도표화한 것임.

성을 분류한 것이 아래의 〈표 4〉다.

환경운동의 역사가 일천하고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경우, 환경단체의 명확한 이념적 지향성을 분석해내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이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조리 대학 정치학과와 패트릭 페리토어(Patrick Peritore)교수가 조사한 ‘한국인의 환경의식’ (『녹색평론』 제9호, 110~123쪽 참조)에서도, 단체의 지도급 인사들도 일관된 시각을 결여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전국환경운동연합’이 결성되면서, 그동안 생태마르크스리즘적 지향성을 지니고 활동해왔던 이들 단체들이 “기존의 강성 이미지에서 벗어나 범국민적 시민단체로 성장해 나가겠다” (한겨레신문 1993. 3. 4: 문화일보 1993 2.23일자 참조)고 밝히고 있는 점이나, 환경처에 등록된 단체들을 관변단체를 몰아붙이던 이 단체들이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등록을 한 사실 등은 대중성의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밀려 이념적 지향성을 포기 또는 약화시

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공추련’의 구성원들이 그대로 ‘환경운동연합’으로 옮겨간 상태이고 보면, 선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7. 맺는 말

나는 나름대로 제4기의 환경운동이 좀더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짧은 운동의 역사안에서도 대중성과 전문성 (각종 부설 연구소·전문환경단체와의 협력체계)이 마련되어 가고, 1991.12 방콕에서 개최된 ‘제1회 아세아-태평양 NGOs 환경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NGOs 간의 연대·협력이 뒷받침된다면, 환경제국주의에 대항하면서 국내적인 문제에도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4기의 환경운동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